

##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욱\*

**요약**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세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고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학력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고실업을 등이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다문화 과정은 다분히 한국인의 일방적 시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국가 정책의 부재와 혼선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는 이주 외국인들이 주류사회로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가 이들의 문화, 종교, 풍습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주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국가 및 지방의 구조와 기구 등이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 국가를 이끌 자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조화와 수용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식과 태도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관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거시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전통의식과 문화와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

**주요어** 고노령화, 고실업률, 동화, 쌍방향, 자원, 조화, 수요, 통합, 다문화

### 1. 서론

국가 간의 왕성한 물품의 교역과 인적 교류의 활동은 과거 수천년 전부터 존재했었던 사실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고 이러한 국제교역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실크로드’는 국가 간의 사상과 종교, 언어와 예술, 문화를 전파하며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 중요한 통로로서 활용되었다. 과거 이러한 국제간의 교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제한적인 통로와 한정적인 수

\* 국립필리핀대학교 딜리만 노동및산업관계대학원, 산업관계학, yongwook.lee@up.edu.ph

단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전 지구적으로 모든 대상들—국가, 기업, 개인, 상품과 서비스 등—이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근대 민족국가 형성 이후 문화의 동질성과 공통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국가의 존재와 유지에 기본이 되는 원리였다. 국민과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민족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경계로 하여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국가가 가지는 영토적 및 문화적인 경계선의 의미를 희석시켰고, 정치적 및 경제적 경계선의 의미는 더욱 약화시켜 복잡·다양한 국가 간 상호작용의 원칙으로 변화시켜 버렸으며 더 이상 한 나라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박기덕, 2012: 5).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국가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더 이상 한국을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 사회를 초래하였으며, 다인종·다문화라는 새로운 현상의 문화가 형성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이민수용국이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던 것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및 서구국가와는 다른 양상의 다문화사회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적 불균형(현장직 노동력부족과 청년실업률의 증가), 저출산율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의 진입, 인구의 고학력 현상 등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이 낮은 사회에서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는 다문화적 사회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게 하였으며, 저개발국가의 남아도는 노동력은 높은 임금을 획득하기 위해 산업국가와 개발 국가로의 이동을 촉진시켰다.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도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낮고 미비한 수준이다. 2006년이 되어서야 ‘다문화’라는 단어가 정부 공식용어로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2007년도부터 정부는 공문서에 ‘혼혈인’이라는 말 대신 ‘다문화 결혼자녀’로, 교과서에서도 한국을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구성된 국가’로 바꾸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도 초보 수준이고 정책들간의 통합성도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다문화 정책에서 국내 이주민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체류자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라면(Soyсал, 1994),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시대에 맞는 정책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다민족·다문화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주민의 실태조사 수준이거나, 이에 의거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당위라고 주장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합법적 이민자라는 제한적 범주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회통합의 방법을 모색하는 수준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 타국과는 다른 다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에서 다문화를 논의할 때 중요 연구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현상이 최근에 진행된 일이라서 그럴 것이다. 또한 다문화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이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고, 또 그런 합의를 위한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기타 유럽에서 대두하기 시작한 배타적인 ‘탈다문화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다문화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외국 이민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두고 그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기보

다는 주류사회에 동화시키거나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외양과 문화에 기인한 거부로도 나타나지만 소득이나 실업문제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기덕, 2012).

한국이 ‘인구가 감소한 고령화 사회’로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민의 수용은 불가피하고,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의 토대가 그리 깊지 않다는 점에서 이주민을 동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다문화사회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이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에 비춰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2. 본론

### 1)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의 정도와 양상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은 크게 직업을 찾아온 ‘취업자격 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 그리고 기타로 대변된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체류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로 분류되는데, 총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9월 말 현재 145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여 2.2%가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그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초반에만 해도 단기체류인이 등록외국인보다 1.5배나 많았지만, 2003년부터 역전되어 2012년에는 오히려 등록외국인이 단기체류외국인의 3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것

표 1.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단위: 명, %)

연도	등록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거소 신고자	총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	비율(%)
2002	252,457	358,340	19,209	629,006	308,165	49.0
2003	437,954	218,426	22,307	678,687	154,342	22.7
2004	468,875	259,464	22,534	750,873	209,841	27.9
2005	485,144	236,958	25,365	747,467	204,254	27.3
2006	631,219	249,542	29,388	910,149	211,988	23.3
2007	765,746	266,011	34,516	1,066,273	223,464	21.0
2008	854,007	263,402	41,457	1,158,866	200,489	17.3
2009	870,636	247,590	50,251	1,168,477	177,955	15.2
2010	918,917	258,673	83,825	1,261,415	168,515	13.4
2011	982,461	277,596	135,020	1,395,077	167,780	12.0
2011.9	996,607	302,739	118,803	1,418,149	170,614	-88.0
2012.9	962,968	307,671	178,294	1,448,933	179,843	-87.6
증감률(%)	-3.4	1.6	50.1	2.2	5.4	0.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 9)

www.immigranion.go.kr, p.9, 10, 16, 18 변형, 2012년 9월 31일 현재.

이다. 불법체류자가 2001년과 2002년에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50%에 육박했었지만, 다행히도 그 후 5년간 20%대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10%대로 떨어졌다. 특히, 등록외국인 중에도 10% 정도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수치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2년 9월호).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체류외국인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사람은 60만 명에 못 미치는데, 그들 대부분이 단순기능인력이고, 전문인력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취업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도 11%를 약간 상회하는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증가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약 80%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합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동아시아

표 2.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 체류자	561,906	51,377	510,529
합법 체류	496,746	47,960	448,786
불법 체류	65,160	3,417	61,743
불법 체류율	11.59	6.65	12.09

총계: 산업연수(D-3) 제외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 9)

www.immigranion.go.kr, p. 20 변형, 2012년 9월 31일 현재.

아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의 협의체를 형성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간 공존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결론이 유추된다. 이들 대부분이 동아시아인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욱 특이한 것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들 중 거의 50%가 중국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다문화화의 실상이 사실 절반은 외국국적의 우리 동포문제다. 또한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송출하는 나라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앵글로색슨 국가들 5개국과 러시아 및 일본을 제외하면 15개국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라 해도 이들은 자국에서 올릴 수 있는 수입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한국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24만 명 가까운 ‘비 전문취업자들’(E-9 비자 소유자)은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및 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지만, 그들 중 22% 이상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이 비전문취업자들은 베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 중 54%가 우리 중국 동포들이며, 몽골,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편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 2) 한국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과 문제점

우리가 지금 다문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문제

표 3.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61,906		496,746		65,160		
동 아 시 아 국 가	분석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동아시아 합계	450,465	80.16	394,403	79.39	56,058	86.03	
	중국	전체	277,069	49.30	260,488	52.44	16,581	25.45
		한국계	255,147	45.40	246,472	49.62	8,675	13.31
	베트남	64,008	11.39	47,093	9.48	16,915	25.96	
	필리핀	21,558	3.83	12,974	2.61	8,584	13.17	
	인도네시아	29,749	5.29	24,402	4.91	5,347	8.21	
	타이	18,984	3.37	15,237	3.07	3,747	5.75	
	몽골	10,499	1.86	7,349	1.48	3,150	4.83	
	캄보디아	18,086	3.21	17,004	3.42	1,082	1.66	
	미얀마	7,774	1.38	7,191	1.45	583	0.89	
	일본	1,731	0.30	1,731	0.35	0	0.00	
	티모르민주공화국	1,007	0.17	938	0.19	69	0.11	
	기 타 국 가	우즈베키스탄	25,825	4.60	24,161	4.86	1,664	2.55
스리랑카		20,736	3.69	18,522	3.73	2,214	3.40	
네팔		15,448	2.75	14,512	2.92	936	1.44	
방글라데시		9,314	1.66	7,352	1.48	1,962	3.01	
파키스탄		4,495	0.80	3,173	0.64	1,322	2.03	
키르기스스탄		1,388	0.25	1,267	0.26	121	0.19	
미국		14,315	2.55	14,234	2.87	81	0.12	
캐나다		4,310	0.77	4,290	0.86	20	0.03	
영국		2,985	0.53	2,979	0.60	6	0.01	
러시아		2,059	0.37	1,916	0.39	143	0.22	
호주		747	0.13	743	0.15	4	0.01	
뉴질랜드		630	0.111	626	0.13	4	0.01	
기타		9,189	1.64	8,564	1.72	625	0.9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 9)

www.immigranion.go.kr, p.21 변형, 2012년 9월 31일 현재.

가 높아 터지고 있다. 금년 들어 메르켈 독일 총리,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자국의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한 것

에서 다문화현상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억제된 극우파 운동과 성장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하여 배타적 민족주의가 쇠퇴하였다. 1968년에 일어난 프랑스 68혁명은 유럽일대에 자유주의와 관용(톨레랑스)의 물결을 확산시켜 이슬람권, 아시아 및 남미 지역에도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무슬림 이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치·경제적인 요소, 즉, 과거 식민정책의 여파로 유입된 식민지 국민의 후손과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라 저임금의 외국 노동력을 들여와 이용하려는 산업이민정책에 의해 유입된 유색인종들이 다문화 사회화를 촉진시켰다(박기덕, 2012: 23).

반면에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1972년 프랑스에서부터 창당되어 오늘날에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및 오스트리아는 물론, 새롭게 민주화된 동유럽의 헝가리와 불가리아에서도, 그리고 북지와 관용의 나라인 북유럽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핀란드)에서도 선거를 통하여 당당하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풍조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자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이 스킨헤드나 신나치의 폭력적인 행태로 나타나 러시아에까지 확산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도 드물지 않게 발생해왔다.

특히, 2000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구미에 반이슬람 정서를 확산시켰으며,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최근 유럽 여러 국가들에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부도에 가까운 어려움 등으로 고실업이 장기화 되면서 복지정책에 차질을 발생시킨 것이 결국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 의식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실업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자신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제공한 복지정책이 재정위기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에 집시 수천 명을 추방하고 이민자 수용 쿼터를 연 2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감축하였으며, 2011년 들어 이슬람 여인들이 공공장소에

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벨기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스페인은 외국인 무직자들에게 ‘자진출국 유인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매일경제 2011.7.27). 특히, 북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민주주의와 반인종주의를 표방하며 “반엘리트주의 및 포퓰리즘을 표방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연금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의 복지 공약”을 내세워 전통적인 극우정당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면서도 반이민정서를 이용하여 ‘자국민에게만의 복지’를 강조하여 일종의 국수주의로 가고 있다(경향신문, 2011.8.2).

한국에서 이민의 실태와 그들에 대한 정서를 알아보자. 한국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현 산업구조를 지속·강화하기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과 삶의 질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로 인한 외국인 신부의 유입, 과다한 대학의 수와 과도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조기유학의 열풍 등으로 인한 외국유학생의 유입 역시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화가 우리의 미래이고 이에 대한 인정과 적응이 미덕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근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은 아직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고 테러행위도 없다. 그러나 2012년 발생한 중국인 오원춘에 의한 살인사건과 같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3)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기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현장노동직을 기피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과, 다른 하나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로 이윤의 극대화와 동시에 노조문제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와 쓰기보다는 자동화하던지 아니면 외국에 생산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생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들 거의 모두가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종에 대한 한국인의 지원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싼 임금이기보다는 한국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이 안고 있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수급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 해주는 해결사이자 지원군인 셈이다. 한국인들이 꺼려하여 입사조차 하지 않는 현장직 노동과 야근 및 휴일 근무 문제도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한국에 온 이들에게는 야근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있어 취업욕구를 오히려 더 부채질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1.8.20).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견 맞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재외동포 취업허용 이후 실질적으로 35만에 가까운 중국 교포들이 건설현장, 식당 및 숙박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인 중·장년층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의 체불을 경험하고 아예 지급받지도 못한 경우도 많았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도 거의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외국인 노동조합 운동이 일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주나 정부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지도자급은 직장을 잃고 추방되기까지도 한다(경향신문, 2011.3.1). 임금의 체불이나 미지급 및 산재로부터의 미보호 등은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조운동이 일어날 것은 당연하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및 비인간적인 대우 등에 대항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거액을 들여 한국에 온 그들로서는 그냥 귀국하거나 추방당하기 보다는 한국에 남아 불법으로 더 낮은 저임금으로 고용되거나, 일용직의 노동직으로 일하게 되며 그들의 사정은 갈수록 어려

워진다. 이런 악순환에 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 파고든 외국인 폭력조직에 가담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다.

한국에는 2009년 10월 현재 14개국 65개 파의 외국인 조직폭력단이 활약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략 4,60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자국민 밀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국민일보, 2009.9.21).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2009년 9월 20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4,524건에서 2008년 20,523건 그리고 2009년 8월 말까지 15,466건에 이르렀다. 특히, 강도, 성폭행,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건수가 2009년 8월 말까지 8개월 동안 338건에 달해 2007년과 2008년의 연간 상응 범죄 수 284건 및 330건보다 월등히 많다. 이들 폭력단들은 경우에 따라 자국 폭력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어 한국에서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때로는 한국 폭력조직과도 손을 잡고 도박, 매춘, 마약 등에 손을 대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가능성에 노출된 외국인들의 범죄는 급격히 늘고 있다.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불행은 그들에게나 우리 사회에 다같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내일신문, 2008.8.6). 정부는 2009년 10월 27일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외국인이 많은 곳에 9개의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도 경찰청은 2009년 11월 19일 현재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외사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리하고 있다(서울신문, 2010.4.8).

#### 4)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이민자들의 준법현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다문화사회화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수용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태 등은 아직 적극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의 의사소통수단을 이

용해 이미 외국인들을 적대시하는 카페와 블로그가 적지 않게 개설되어 있는데, 어떤 반다문화 카페는 6,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매일경제 2011.7.27). 이 블로그나 카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를 두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경향신문, 2011.7.27).

한 여론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에 의하면(김병조 외, 2011: 53-64),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상당히 전향적이었다.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47%), 인권침해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43%)면서, 대체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고 시민권 부여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범죄율을 높인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그들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한국인이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을 그들의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국가 및 민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차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해온 진정 건수 중, 2001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것은 213건, 출신민족에 관련해서는 10건 그리고 피부색을 이유로 제기해온 것은 7건, 인종을 이유로는 50건이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2011.7.27).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신고가 과거에는 거의 없거나 한 자리 수였는데, 그것이 2009년부터 두 자릿수로 늘어 2009년에는 22건 2010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 때문에 차별 받은 경우도 2007년 이후 103건에 달했다. 이런 차별이 결혼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도 발생되었겠으나, 노동현장에서 땀 흘리며 몸을 맞대고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나 출신배경 및 외모에 따른 차별은 높아지는

청년 실업과 한국이 사이버 부문의 최첨단 국가임을 고려하면, 향후 더욱 많은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외국인들의 체류가 급격하게 늘어가다 보니, 많은 위법 및 탈법자가 생겨나고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위법 및 탈법자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을 영입하는 우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체류자의 본래 목적이나 복지에도 맞지 않는다. 표 4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유형과 그 처리를 보여주며, 위반자의 수는 앞서 보았던 여러 가지 통계수치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패턴을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추세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2005년도에는 강제퇴거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2009년도에도 3만 명에 육박하였지만, 2011년에는 1만 8천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하락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를 받은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금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한 금액과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추방된 사람들은 자기를

표 4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sup>1</sup>

(단위: 명, 천원)

연도	총계	강제 퇴거	출국 명령	출국 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천)		건	금액(천)	
'04년	67,734	19,307	1,511	2,259	20,444	22,747,620	780	7,245	1,354,830	16,188
'05년	105,212	38,019	2,523	3,152	19,123	31,985,462	1,595	8,327	1,498,020	32,473
'06년	69,674	18,574	901	2,509	22,468	20,173,221	1,438	6,231	957,645	17,553
'07년	72,712	18,462	948	2,458	26,212	28,724,790	1,437	6,959	1,002,700	16,236
'08년	105,941	30,576	1,240	3,689	26,325	34,486,326	2,186	11,200	1,421,543	30,725
'09년	100,337	29,043	1,180	2,401	23,851	31,989,135	2,470	11,434	1,546,146	29,958
'10년	94,232	13,474	1,472	2,781	33,109	43,505,440	1,171	11,987	1,700,448	30,238
'11년	92,970	18,034	2,250	2,862	31,417	44,874,390	928	10,435	1,520,690	27,04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9)

www.immigration.go.kr, p.29 변형, 2012년 9월 31일 현재.

1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는 통고처분 등의 병과 처분이 없는 경우임

의 부주의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궁하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비판과 좋지 않은 태도로 자국을 여행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적절하게 법제를 정비하여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례가 늘지 않게 하고 이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 등을 받는 숫자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모국과의 협조를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 구성도 필요한 것이다.

### 5) 한국 노동현장의 바람직한 다문화현상을 위한 노력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노동력이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위법 및 범법행위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국가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로 이용 할 수도 있다(Akaha, 2004; Akaha and Ertkin, 2008). 노동력의 이주로 인해 민족과 국가간 상호인식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역 내 경제발전 및 경제 수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모국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본국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러한 해외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듯 이주자들이 모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특성이자(Castles and Miller, 2009: 62). 따라서 이주로 인한 혜택이나 손실이 일방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이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공존 정책은 역내 주민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간 상호협력과 신뢰 증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어서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다문화 공존'정책으로 연결되고, 초국가적 거버넌스 형성의 필요성을 제고하게 되었다(Grugel and Piper, 2007: 41). 국가 간의 인구과잉과 과소, 노동력의 부족과 과잉, 여성의 저고용, AIDS나 SARS

및 H1A1과 같은 질병의 전파, 불법이주와 인신매매, 난민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들은 이런 점에서 다문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역내 국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정체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이주는 지방적, 국가적, 초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제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의 경제적·정치적·법률적·사회문화적 효과는 국가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론 국가 간에도 긴장을 야기한다. 따라서 국제 이주가 수반하는 다면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문화 공존의 정책적 기반을 탐구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는 지역 내 국제이주의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와 다문화 공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가간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내 국가간 식민종주국-피지배 관계의 경험과 냉전시대에 이념적 분계선에 따라 집단적으로 맞섰던 경험이 이 지역의 국가 간 이주문제에 의해 역내 국제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요인이다.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과정에서 보았듯이 이주 수용국에서 생길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반감 및 배타적 민족주의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공식 논의와 이주자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광범위한 상호협약의 필요하다. 따라서 초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 공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조직되어 운영된다 보면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도 가능하게 하는 선행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박기덕, 2012).

한국이 동아시아지역의 주요한 이주 수용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적합한 노동력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차원의 자구적 행사로 인해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이주의 과잉현상과 관리부재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더 심각해 질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NGO 들의 동남아시아국가에 대한 경제 및 교육 원조, 기타 개발지원사업과 한국 이 안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결합하여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특징을 보면 주로 동남아시아지역의 노동자로 해당 국가의 일자리부족과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자기나라에서의 월급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할지라도 그들의 강한 의지와 동기부여는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선택하게 하고 합법적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외무부의 통계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수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국제협력기관(예: KOICA 등), 민간 NGO 단체(예: 굿네이버스 등)들이 동남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 및 원조사업을 진행할 경우,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교육을 중점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세종학당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추진하면서, 본국에서 이미 교육된 인원들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맞춤형 국제협력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용욱, 2010: 55).

한국의 중소기업은 이미 자국에서 한국의 정부기관과 NGO들의 기술교육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업무 수행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의사소통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노동현장에서 근로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방정부와 해당기업, 지역 단체, 학교기관의 연계된 보수교육과 한국사회적응지도를 받게 되며, 기간 중 발생하는 고충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합법적인 근로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

는 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근로행위를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할 경우, 해당 나라의 직업관련청과의 연계 또는 그 나라에 이미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기업과 또는 교민업체와 연계하여 한국문화와 언어 그리고 기초 기술을 습득한 우수한 노동자원을 채용함으로써, 해당 노동자는 자국으로 가서도 높은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해외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자영업자에게는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이용욱, 2010: 56).

### 3. 결론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세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고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학력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고실업률 등이 한국 노동현장의 다문화현상을 촉진시키고, 반대로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른바 우리는 세계화의 중심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이용욱, 2010: 22).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는 이주 외국인들이 주류사회로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가 이들의 문화, 종교, 풍습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국가 및 지방의 구조와 기구 등이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민의식과 태도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관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정책은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주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국가와 이주외국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지역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각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현재와는 다른 방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는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문화 정책 실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삼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수행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사회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왔다고보다는 단기적인 해결방안만을 강구한 측면이 더 강하다. 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철학적인 비전을 결여한 상태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기에 대한 정책대응 역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없이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초보적 수준의 교육적 접근에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에 실패하고 있으며, 심지에 외국인들의 범죄조직이 등장하고, 한국인에 의한 외국인 노동착취와 임금의 체불, 여권 및 신분증의 압류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방지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한국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다문화정책의 철학 및 노선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대안적인 사회통합 모델 또는 사회발전모델을 정립한 후, 그 실현을 위한 거시적,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구상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정부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조율된 정책을 산출해내지 못한다. 이는 다문화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및 지원사업에 포함된 모든 부처의 해당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판단하는 부처를 창설하여 관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의식과 문화를 지켜가면서,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이 유입되어 조화를 이루고 상호 배타적인 관계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형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사명이 아닐까?

## 참고문헌

- 매일경제, 경향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등 국내 일간지.
- 박기덕, 2012, 한국 다문화사회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2,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www.immigration.go.kr(검색일: 2012년 10월 20일)
- Lee, Yong-Ok, 2010,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School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Industrial Relations Society(PIRS) Conference, Unpublished Paper.
- Akaha, Tsuneo, 2004, Cross-Border Migration as a New El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 Boom to Regionalism or a New Source of Friction?, Asian Perspective 28-2.
- Akaha, Tsuneo and Brian Etkin,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Human Rights: A Case for a Regional Approach in Northeast Asia, Martina Timmermann and Jitsuo Tsuchiyama eds,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 Tokyo,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Grugel, Jean and Nicola Piper, 2007, Critical Perspectives on Global Governa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 Strategy on Analysis of Present State in Labor Environment of Korea and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Problems caused by being Processing Multicultural Phenomena**

Yong-Ok Lee\*

**Abstract** Multi-cultural phenomena in labor environment of Korea has been made by rapid economics globalization of Korea. High speed multi-culturalization in labor environment of Korea is due to shortage of labor, Korea's being approaching on aging society, inflation of attainments in scholarship, etc. But high speed multi-culturalization in labor environment of Korea has been made on the one-sided view of Korea, and from bad to worse, the dehumidified policies implement and confusion of government has led to many side-effects of multi-culturalization. The ideal Multi-cultural society are to be harmonized with both sides, not to be assimilated to the main party in culture, religion, and customs etc. For these, our system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ursuit the policies with harmonization and toleration, in that the immigrant labors are the sources to develop our nation. In addition of these, civic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Korea society should be formed to the degree of recognition to their sense of values and variety, so called, tolerant integration. On these basis of these macro view, Korea traditional consciousness and culture and the foreigners' ones are to be merged to the IDEA of multi-culture,

**Keywords** labor environment, multi-culture, aging society, inflation of attainments of scholarship, culturalization, harmonization, integrity

---

\* School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Industrial Relations, yoonwook.lee@up.edu.ph